



RICON

건설 BRIEF

건 설 브 리 프

산업동향

- 일본정부의 「인프라 해외전개 행동계획 2022」 수립 내용 및 시사점
 - ODA+PPP를 활용한 수직적·수평적 통합 패키지 필요

정책동향

- 건설공사 원·하수급의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 안전책임에 상응한 권한, 역할 및 비용의 분담 절실

시장동향

- 최근 확장적 주택정책에 따른 하반기 전문건설시장 전망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과 공사계약액 순환변동 분석을 활용한 단기 전망

산업동향

일본 정부의 「인프라 해외전개 행동계획 2022」 수립 내용 및 시사점 - ODA+PPP를 활용한 수직적·수평적 통합 패키지 필요 - 조재용 책임연구원 (adelid83@ricon.re.kr)

1. 일본 정부의 「인프라 해외전개 행동계획 2022」 수립

◆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 인프라 수요는 방대하고,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인프라 수요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국내 건설 시장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일본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인프라 수요에 맞추어, 일본 기업의 수주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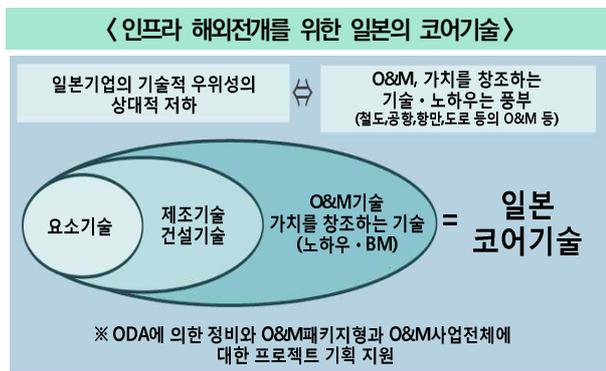
◆ 일본 정부는 2035년 34조 엔의 인프라 시스템 수출을 주요 목표로 설정

- 내각관방장관, 재무성장관, 총무성장관, 외무성장관, 경제산업성장관, 국토교통성장관, 경제재생담당장관으로 구성된 인프라전략회의는 2020년 12월에 국가의 인프라 해외 수출 전략에 해당하는 「인프라 시스템 해외전개전략 2025」를 발표하였으며, 일본기업이 2025년에 34조 엔의 인프라 시스템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치(KPI)로 설정한 바 있음
- 상하수도 분야에서 7조 엔, 교통 분야에서 8조 엔, 디지털 분야에서 11조 엔, 건설·도시 분야에서 4조 엔, 농업·의료·우편 등의 분야에서 4조 엔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여기에는 건설 시공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 및 납품, 설치 등 인프라와 관련된 모든 수출을 대상으로 함
- 내각부의 「인프라 시스템 해외전개전략 2025」에 맞추어 최근 국토교통성은 「인프라 해외전개 행동계획 2022」를 수립함. 인프라 해외전개 행동계획은 2012년 아베 정권 하에서 인프라 시스템 수출전략을 처음 작성되었으며, 매년 해외국가의 동향과 전략 수정에 맞추어 작성하고 있음
- 2019년 일본의 인프라 시스템 수출 실적은 27조 엔이며,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도 6월 시점까지 24.4조 엔을 기록하였음. 건설 시공부문 수주액은 2019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엔을 기록한 이후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1조 엔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1.8조 엔으로 팬데믹 이전 규모를 회복하고 있음(일본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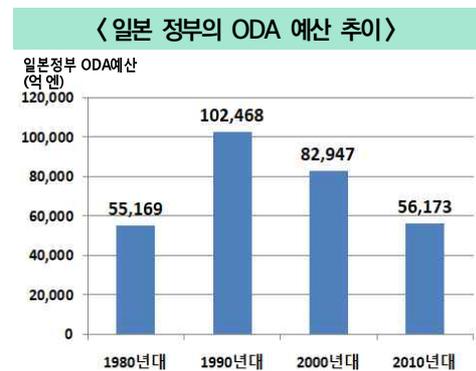
2. 「인프라 해외전개 행동계획 2022」의 4가지 대처

◆ 인프라 해외전개 행동계획 2022는 4가지 대처를 핵심으로 제시

- 인프라 시스템 수출은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각총리와 각 부처 장관 레벨에서 직접적인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① O&M 기획 참가를 통한 지속적 관여 강화, ② 기술과 의욕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 기획 지원, ③ 국제표준화 추진과 전략적 활용, ④ 디지털·탈탄소 기술 활용의 4가지 대처를 제시함
- ① O&M 기획 참가를 통한 지속적 관여 강화 : 기획 단계부터 톱 세일즈와 엔 차관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건설 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ODA+PPP형을 집중적으로 추진
- ② 기술과 의욕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 기획 지원 : JOIN은 건설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인프라와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 및 중소기업, 지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하고, 해외진출 사례집을 작성
- ③ 국제표준화 추진과 전략적 활용 : ISO 등 국제표준을 획득하고, 경쟁 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
- ④ 디지털·탈탄소 기술의 활용 : 스마트시티, 에너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탈탄소화 기술을 적용하고, 수소 자동차, 수도 철도, 수소 선박 생태계를 구축



*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 자료: 일본 외무성

3.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주는 시사점

◆ 해외진출에서 수직적·수평적 통합 패키지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

- 일본 정부는 인프라 수요는 높으나 충분한 예산이 없는 신흥국을 대상으로 초기 인프라를 지어주고,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비용을 회수하는 ODA+PPP전략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진출이 단순히 건물의 시공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기획 및 예산확보,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수직적 패키지와 전력, 통신, 의료 등 다양한 산업과 수평적 패키지를 구성하여 진출하는 전략을 검토할 시점임
- 재정적으로 제한이 있는 신흥국가 진출을 위해서는 진출 기업의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및 건설하고, 이를 운영함(O&M)으로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PPP방식이 필요함

정책동향

건설공사 원·하수급의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 안전책임에 상응한 권한, 역할 및 비용의 분담 절실 -

홍성호 선임연구위원(hsh3824@ricon.re.kr)

1. 도급사업에서의 원·하수급자 안전책임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사업에서 원수급자의 안전책임 강화와 함께 사업주로서 하수급자의 안전책임도 강조

-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원수급자) 산재예방 책임강화와 함께 관계수급인(하수급자)이 사업주로서 의무(산재 예방기준 이행,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를 수행하도록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 중대재해처벌법도 원·하수급자 모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처벌방지 대책 수립·이행, 관계법령 시정조치 이행, 관리상 조치)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현장 원·하수급인 안전책임 >



<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현장 원·하수급인 안전책임 >



2. 원·하수급자 안전관리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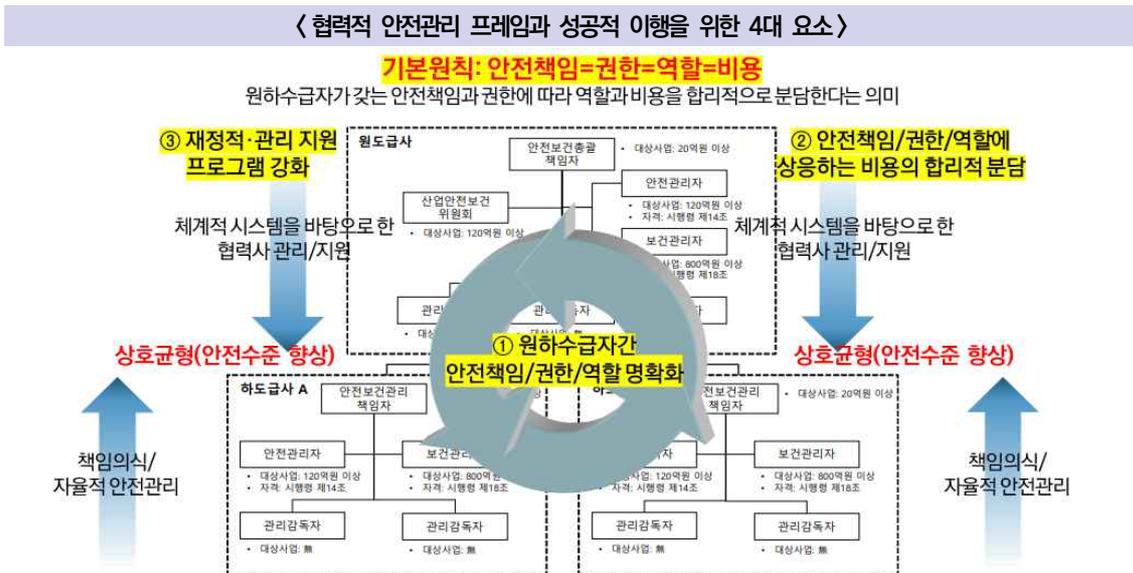
◆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원수급자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원·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로 전환 필요

- 협력적 안전관리라 함은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 장비임대업체 등 건설현장 참여 주체 모두가 상호준중과 자율에 기반하여 재해예방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문제의 해결, 자원의 교환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안전관리체계를 의미
- ① 총괄/안전관리 주도, 협력의 중심점(원수급자) 역할 중요, ② 원수급자의 Top-Down 안전관리와 하수급자의 Bottom-Up 안전관리가 상호 균형을 이룰 때 안전수준 향상



3.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원칙과 4대 요소

- ◆ 기본원칙은 안전책임에 상응한 권한, 역할 및 비용의 분담이며, 이를 위해서는 4대 요소가 절실
 - ① 원·하수급자간 안전책임·권한·역할 명확화, ② 비용의 합리적 분담, ③ 하수급자를 위한 원수급자의 재정적·관리적 지원 프로그램 강화, ④ 하수급자의 안전의식 및 역량 강화



시장동향

최근 확장적 주택정책에 따른 하반기 전문건설시장 전망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과 공사계약액 순환변동 분석을 활용한 단기 전망 -

권주안 연구위원(jooankwon@ricon.re.kr)

1. 최근 확장적 주택정책에 따른 하반기 시장 영향 및 동향

◆ (정부 정책) 잇따른 시장 정상화 정책 발표로 안정적 연락처 유지

- 최근 들어 과거 공공 중심의 체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확장적 정책 지속
- 주택시장 위축 정도와 속도를 완화시켜 안전한 연락처 여건 조성

◆ (주택공급) 인허가 물량은 감소, 미분양은 소폭 증가 : 안정적 시장 여건

- 인허가 물량 등 공급 통계는 5월 누적 기준으로 감소 중이나, 시장 금리 상승과 가격 상승 전망 약화로 위축된 수요와 공급 상황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 미분양은 소폭 증가세를 지속 중이며 5월 기준 지방은 2.4만호, 수도권은 3.6천호의 미분양을 기록함. 지방 미분양 확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건으로 작용되었음
 -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5월 6.8천호로 안정 수준을 유지중이고, 지방에서의 신규 공급 감소분을 반영

◆ (주택수요) 시장 금리의 지속적 상승과 매매가격의 상승 전망 약화로 수요 여건 악화

- 정부의 실수요 중심 수요 확대 정책으로 위축된 수요는 실수요 중심으로 회복
- 임대차 3법 이후, 8월부터 임차계약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갱신 보다 신규 선택이 많을 경우 전월세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고, 시장 금리 상승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확산되고 있어 월세시장 불안정성 역시 증대

◆ (주택가격) 소폭 가격 하락 유지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거래의 소폭 증가로 시장 기능은 점차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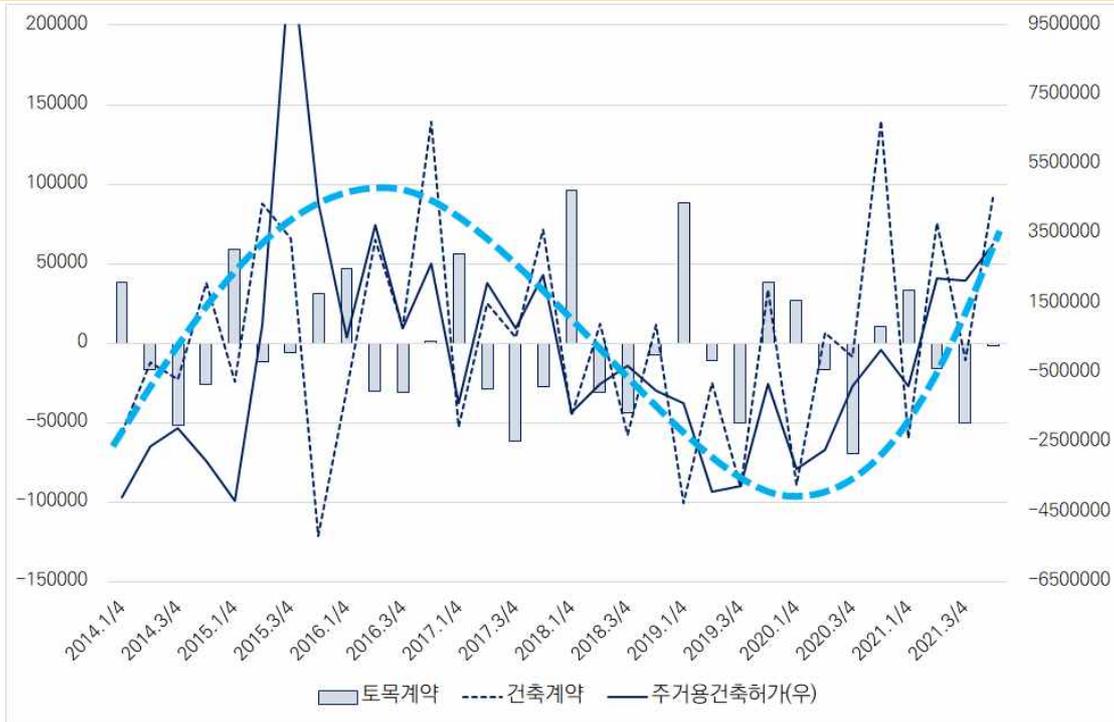
-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악보합 유지와 함께 월세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점유유형별 격차 발생 예상

2. 주택정책의 영향을 고려한 하반기 전문건설시장 전망(단기)

- ◆ 전문건설 공사계약액 변동성을 순환변동을 통해 분석 : 건축업은 민간 주택시장 변동에 영향을 받는 동행성 관계로 관찰되며, 단기 건축건설업시장은 안정적 성장 예상

- 토목건설업은 정부 등 공공발주 물량과 인프라 예산 규모에 따라 매년 일정 물량이 공급되며, 순환변동 패턴은 일정한 폭을 가지고 부침을 반복하는 안정적 변동성을 보임
 - 토목건설업계약액 변동은 매년 1분기에 확장하고, 2~4분기에는 수축하는 변동성을 반복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의존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반면 건축건설업계약액은 건축하기면적, 특히 주거용 건축하기면적의 순환변동과 동행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토목건설업과는 달리 민간시장과의 강한 연관관계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건축건설업계약액과 주거용 건축하기면적의 순환변동 패턴은 중기(10년 이하) 기간의 범위에서는 2021년 부터 확장 국면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주거용 건축하기면적의 단기 변동이 확장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동행성을 가진 건축건설업계약액도 단기 확장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건축건설업의 단기 여건은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정부의 확장적 주택정책, 특히 수요 회복과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건축시장 확장세도 비교적 강할 것으로 판단됨

〈 전문건설업의 공사계약액(토목, 건축) 및 주거용 건축하기면적 순환변동 〉



자료 : KOSIS 통계자료 기반한 분석

◆ 전문건설업은 하반기 안정적 성장 전망과 함께 불안정적인 시장위험 공존

- 연이은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들로 야기된 건축물 및 공사 안전에 집중되는 관심과 정책 강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종합건설과의 제한적 경쟁에서 무한경쟁으로의 전환에 대한 준비 등으로 전문건설업의 사업위험은 증대되고 있음. 또한 업체 수 증가로 인한 동일 혹은 유사 업역 내 경쟁 심화 등은 전문건설업 전체에 대한 영향도 있겠으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사업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4차 산업혁명으로 요구되는 노동의 기술화 추세와 스마트건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도 전문건설업의 개별기업에게는 경영 여건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충격일 수 있음.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점검과 준비에 더하여 전문건설협회 차원의 집단적·체계적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적 변화는 항상 많은 위험과 함께 다가오기 마련이며, 개별주체(기업)들의 노력과 미래지향적 통찰을 요구하게 됨. 따라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도 환경의 변화를 새로운 발전적 국면으로의 전환이라는 접근에서 출발하는 시각이 필요함